

전북자치도, 2025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주요 과학기술정책 동향 · 대응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 위원회 성과 점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면적 위원 9명과 도내 주요 연구기관장 및 대학 등 각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사업 기획·평가·관리,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책사업 반영 성과... 9,705억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도 새롭게 출범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김관영 도지사 "미래 첨단산업 육성 최선"

일 국비 확보

전북과학기술위원회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그간(2008~2023년)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과제 636건을 발굴해 국가사업 167건에 반영시키며, 총 9,7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1건의 국가사업을 반영하며 860억 원의 국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5건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 23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건 155억원, 행정안전부 1건 15.7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서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방위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AI, 바이오 등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회 구성을 확대·조정한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회는 △첨단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지능형 기계·조선 △에너지수소 △첨단바이오 △K-방위산업 △이차전지·반도체 △탄소중립 △재난·안전 △문화관광·콘텐츠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지역 주도형 대형 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다양한 융복

합 과제 개발을 추진해 전북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R&D 지원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정책 확대 및 산업혁신 생태계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인프라와 연계한 R&D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대형 국책사업 발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가사업 반영을 지속 추진해 전북 산업혁신 생태계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발굴로 위기 극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 특화된 과학기술 발굴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지속 성장 가능한 전북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경제·산업 육성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과학기술위원회가 전북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주춧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가 전북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종복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이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종복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영농

상속공제 상향범' 대표 발의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

현행법은 거주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양어)·영어(양어)·영림(양림)에 포함되는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 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기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기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승=김대환 기자



“도민 체감 복지 특례 발굴해야”

도의회 농복합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3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수혜집단에 대한 정의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조치과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숙형 경로당 등의 시범사업 발굴을 고려하고,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병명의 종류에 따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장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적 불편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돌봄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 배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유보통합 관련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책 관련 주제들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민 의원(남원1)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복지 분야와 관련한 전북도의 실행전략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와 특례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 관련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동물복지 강화에 169억원 투입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개 식용 종식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를 위해 169억 원을 투입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유기 동물보호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이성호 과장은 도청 기자회견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기반 시설 확충(34억원) ▲동물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46억원) ▲개 식용 종식 지원(89억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우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늘리고 복지 기반을 강화한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고창군에 '반려동물 동반 국민 여가 야영장'을 추가 조성하고,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늪은 장수군·임실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지원하고,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 확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기 동물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확대해 유기·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 동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이성호 과장이 13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입양 시 예방접종·중성화수술·질병 진단비 등을 지원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길고양이와 농촌 실의 사육견의 중성화수술 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 평가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개 식용 종식 지원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2024년 2월 6일 공표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전·폐업을 지원해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유기 동물보호 및 입양 지원, 반려 문화 확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완주군 수소산업 선도적 지위 확보해야”

윤수봉 도의원, 국제수소거대소 설립·수소경제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화운영위원장, 완주)은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2층)에서 '국제수소거대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문승우 의장의 환영사와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윤수봉위원장의 취지설명,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수봉 의원은 "국제수소거대소 설립 필요성과 역할,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 수소경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교역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수소거대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의 관련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북



'국제비즈니스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희 전북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제 수소산업 동향과 국제표준 고품질 설비 개발, 전북자치도 자원을 활용한 국제수소거대소 설립 방향 등 현역의 미래산업과 생태계를 고려한 혁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은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과 김지민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전략팀장, 송민호 완주군 수소산업정책관, 김정현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수석상임이사, 이지훈 박사(전북연구원),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김육상 양식 성공 위해 상생협력

새만금청, 도·풀무원 등과 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공모(해양수산부 주관) 지원 전략회의 이후, 어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2월)를 거쳐 추진됐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풀무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어촌진흥위원회, 전북자치도 김생산 어민연합회,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군산지회, 국립 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김육상 양식 기술 상용화에 따른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다.

참석한 어업인 대표들은 "세계 최초 김육상 양식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지역의 어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항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군산 지역 김동구·박정희 도의원은 12일 늦은 오후 도의장실에서 군산항 발전협의회 고병수 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토사 준설문제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군산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군산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토사 매몰 현상에 대해 상시준설이 가능하도록 준설선을 배치하거나 전담기관인 준설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군산항 물동량 확충 차원에서 군산에 위치한 SCG에너지, OCI SE, 한화에너지 등 발전소 3사의 우드펠릿 물동량을 광양항에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